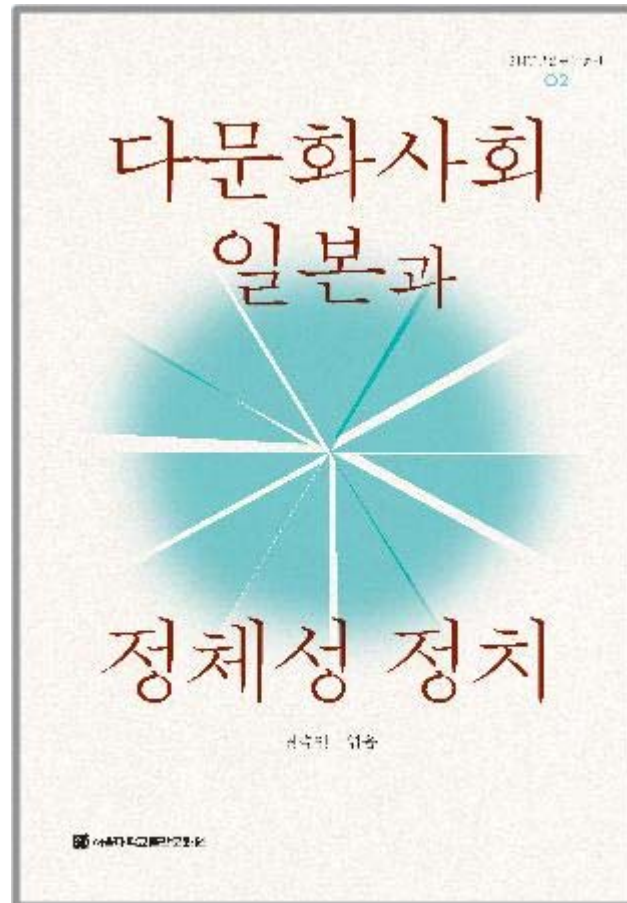


## 다문화 사회로 가는 한국의 거울..일본

연말뉴스 | 기사입력 2010-09-10 10:53



서울대 일본연구소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출간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옮겨 가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결혼이주를 통해 구성된 다문화 가정을 어렵잖게 볼 수 있고 취업  
을 위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었다.

다문화 사회화가 진행되면 복수의 문화와 정체성이 충돌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  
서 생기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다민족  
화가 진행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나왔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최근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권숙인 역음)'를 펴냈  
다. 서울대 권숙인 교수와 한영혜 일본연구소 소장, 아사노 신이치 고베대학 교수

등 6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이 책은 다문화·다민족화가 일본 사회에 제기하는 도전과 과제, 일본의 대응 방식을 고찰하고 지구화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짚어냈다.

재일 조선인, 홋카이도 등에 살던 일본의 원주민에서 소수 민족으로 전락한 아이누족, 세계대전 패전 이후 중국에 남았던 일본인 고아, 필리핀 여성의 일본 이주 등 일본내 다문화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민족명' 문제를 통해 재일 조선인이 겪은 억압과 저항의 역사를 돌아보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개돼 온 새로운 정체성 경향을 고찰한다.

여기서 책은 조선인들의 일본 거주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에게 '민족'이 반드시 혈통과 문화적 전통의 공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조선인의 삶 자체가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결혼 방식, 정치적 지향, 세대 등에 따라 일본과 조국, 민족, 자아의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민족명도 서로 다른 삶의 궤적과 정체성을 표출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1997년 '홋카이도 구토인보호법'을 폐기하고 '아이누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아이누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문화주의를 공식화하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 법은 문화진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아이누 민족정책을 탈정치화하고 현실적인 쟁점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아이누인들은 이에 맞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체성을 다시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아이누를 둘러싼 정체성 정치가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책은 전망한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52쪽. 1만8천원.

kong@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이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4650091>

---

인쇄하기 취소